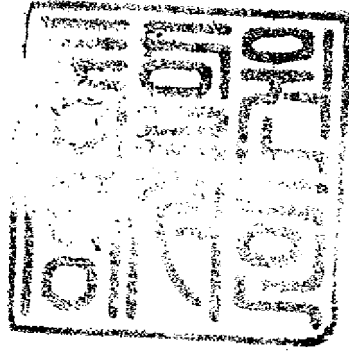


통남 95-12-93

'95 논문 발취집

남북간 민간부문 접촉·대화문제

1995. 12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우리국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목 차

I. 개 요	5
II. 학술·문화분야	9
1. 남북학술교류 활성화 방안	9
가. 남북학술교류의 필요성	9
나. 남북학술교류의 현황	12
다. 남북학술교류의 특성	13
라. 남북학술교류를 통한 기대과제	15
마. 남북학술교류의 단계별 실천방안	16
바. 남북학술교류 증진방안	18
2. 남북 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	20
가. 남북간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20
나. 남북간 문화적 상황의 비교	21
다. 남북 문화통합의 방향	24
라. 남북 문화통합의 전망	28
3. 동서독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	32
가. 동서독간의 사회문화교류 선례	32
나. 독일통일과정의 특성	33
다.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34
라. 결 론	35

Ⅲ. 언론분야.....	37
1. 남북언론교류 문제	37
가. 남북언론교류의 특성	37
나. 남북언론교류 문제의 제기	38
다. 통일지향적 언론의 역할	38
라. 남북대화시 언론의 문제점	40
마. 동서독 언론의 사례와 그 교훈	42
바. 통일지향적 언론의 과제	44
사. 개선방안	46
2. 남북방송교류 문제	48
가. 문제의 제기	48
나. 북한의 방송과 그 선전적 특성	49
다. 남북방송교류의 경과	50
라. 남북방송교류 및 보도의 문제점	53
마. 동서독 방송통일과 그 시사점	56
바.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몇가지 제안	57
Ⅳ. 종교분야	62
1.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별 현황	62
가. 북한체제와 종교	62
나. 불 교	63
다. 기독교	65
1) 조선기독교도연맹	
2) 조선천주교인협회	
라. 천도교	68
마. 기타 종교	70

2. 남북 종교교류 현황	71
3. 남북 종교교류의 성과와 문제점	77
가. 성과	77
나. 문제점	78
4. 결 어	82
가. 종교인의 과제	82
나. 통일과 종교	84
V. 여성·체육분야	87
1. 남북여성교류 문제	87
가. 남북여성교류의 특성	87
나. 남북여성교류의 중요성	88
다. 남북여성교류의 경과	88
라. 남북여성교류의 문제점	90
마. 남북여성교류의 확대방안	92
2. 남북스포츠교류 문제	93
가. 스포츠교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93
나. 남북스포츠교류의 정치적 기능	93
다.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남북한간의 입장차이	96
라. 남북스포츠교류의 활성화 방안	98
수록논문명	100

I. 개요

- 본 자료집은 남북간 민간부문 접촉·대화문제와 관련하여 1995년도에 각종 세미나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19편)과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외부전문가에게 위촉한 논문(4편) 등 총 23편의 논문중에서 회담운영대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각 세부 분야별 정책자료들을 발췌한 것으로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학술·문화분야〉

- 9편의 논문중 5편이 남북학술·문화교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그 증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3편은 남북문화통합 및 교류에 관한 전반적 상황을, 그리고 나머지 1편은 동서독 사회·문화교류 선례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음.
- 남북학술·문화교류의 증대를 위해서는 문화유산 공동조사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 각분야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남북문화통합 및 교류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남북문화를 비교하는 가운데 문화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통일환경의 조성과 관련하여 남북사회·문화교류를 고찰하거나 민족주의와 진보

주의 담론을 중심으로하여 남북사이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 고찰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동서독의 사회문화교류 선례에서는 우리가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인내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북한에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역설하고 있음.

〈언론분야〉

- 언론분야에는 총 6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는데, 이 중 언론에 관련된 논문이 3편, 방송·보도에 관련된 논문 3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언론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독일통일과정에서 가능한 언론의 역할을 남북관계에서도 적의 감안하고 통일지향적 언론의 역할과 남북대화시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선정적 보도·오보·추측기사 등을 지양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있음.

- 방송·보도분야에서는 북한방송의 개방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교류·협력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전파방송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등을 북한관련 보도의 문제점과 함께 제시하고 있음.

<종교분야>

- 6편의 논문 가운데 북한 종교실상에 관련된 논문이 4편이며, 나머지 2편은 남북종교교류 창구단일화 방안 및 우리 종교인의 과제를 다루고 있음.
 - 북한의 종교실상을 다룬 논문들은 북한 종교정책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왔는가를 시기별로 조명하고 각 종교별 현황을 고찰하고 있음.
 - 남북종교교류 창구단일화 방안에서는 정부가 종교를 통해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교인들과 사전협의체제를 구축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한편 우리 종교인들의 과제로는 종교인들이 대북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욕심을 앞세워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태도를 지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여성·체육분야>

- 여성·체육분야에서는 여성문제 2편, 체육문제 1편의 논문을 수록하였음.
 - 여성교류에 있어서는 비정치성, 유연성 등 그 특성과 중요성을 바탕으로 대북여성교류를 단·중·장기로 분리하여 대안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체육문제는 남북스포츠교류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남북스포츠교류에 있어 우리측의 보다 확고한 기본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Ⅱ. 학술·문화분야

1. 남북학술교류 활성화 방안

가. 남북학술교류의 필요성

- 남북교류는 무엇보다도 “객관적” 입장으로부터의 접근이 요구되며, 남한과 북한은 제각기 다른 가능성으로써 분단 50년을 견디어 왔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서로 하나의 “거울”로서 이용될 수 있음.
 - 남북 두 체제는 체제의 한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대화 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상대방의 체제를 알게 됨으로써 각자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가능해지며
 - 지난 50년동안 잘못 평가해 온 역사나 놓쳐버린 역사인식을 되살릴 수 있고
 - 각 체제가 간직해 온 사회·문화적 전통으로부터 미래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공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나 교류는 전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투명한 것을 전제로 함.

- 남북관계가 분명할 경우에만 남북 교류나 만남은 일상화 될 수 있으며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 남북이 그동안 구축해 온 상대방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생각과 편견을 없애고 각 체제가 분단 50년의 역사속에서 성장해 온 현실에 시선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 또한 대화파트너 자신이 이질적인 다른 체제에 대해 개방적이지 않고, 교류가 지속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나 교류는 성공할 수가 없음.

〈이남복(청주대 교수), 「통일환경의 조성과 남북사회·문화교류」(배재대 세미나, '95. 11. 9)〉

- 남북의 민간교류는 그간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부간 교류라는 근본이 해결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음.
 - 교류와 관련된 논의와 주장은 무성한데 비해 실제 교류가 성사되는 일은 드물고
 - 혹 있다고 해도 지속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남북관계 정책이 아직 과거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없다는 점으로 귀착됨.

- 노동당의 강령과 헌법이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주장하고 있고
- 대남 선전·선동활동 역시 하등의 변화가 없으며
- 북한에는 남한의 민간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민간’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노동당과 정부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임.

※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외형적으로 민간단체인양 행세하지만 실은 모두 당과 정부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받고 행동하고 있음.

○ 이런 결과들은 남북의 민간교류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음.

- 한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나고 보자는 식의 감정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민족전체에 유익한 것인가도 의문이며
- 민간인끼리의 접촉이 잦아지면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낭만적이란 점이 점점 확인될 뿐임.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북민간교류 활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 진전시켜야」(월간 『전망』, '95. 7월호)>

나. 남북학술교류의 현황

- 남북한은 그동안 출판보도분야·학술분야·예술분야·종교분야·체육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이 서로 교류·협력해 왔는데, 1990년부터 1995년 9월까지 6년여 동안의 남북주민간 접촉현황을 보면 성사된 접촉이 모두 1,494건에 4,922명에 달하고 있음. (표 * 참조)

<표 * > 분야별 남북주민간 접촉 현황(1990.1-1995.9)

단위 : 명

	이산가족	학술	문화	종교	체육	경제	언론출판	관광교통	기타	계
건 수	732	92	23	36	16	494	24	27	50	1494
인원수	813	1309	398	335	62	1082	91	81	751	4922

<자료 :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 9월호에서 발췌 작성>

- 남북 주민간 접촉 건수로 가장 많은 것은 이산가족이지만
- 접촉 인원수가 가장 많은 것은 전체 4,922명의 26.6%인 1,309명(10월 말 현재로는 1,332명)을 차지한 학술분야임.
- 이와 같은 결과는 접촉 건수로 볼 때도 이산가족(732건), 경제(494건)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하며, 최근 경제관계 접촉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학술관계 접촉이 가장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학술분야에 있어서 남북주민간 접촉은 주로 국제적인 학술회의에 함께 참석하므로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 1990년 이후 약 6년 동안 남북한 학자들이 공동으로 참가하여 교류한 것은 모두 61건이었음.
- 교류분야도 매우 다양하여 한국학, 지리학, 미래학, 법률, 한의학, 언어·철학, 언론, 물리학, 환경, 전자·정보·통신, 동북아 경제협력 등 여러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통일, 안보, 군축과 같은 전략적 문제도 학술적 차원에서 다루어 졌음.
 - 참석 인원수를 보면 남한이 1,332명인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462명이 참석하여 34.7%에 그쳤지만, 북한은 모두 국가에서 파견하고 남한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였음.

〈서길수(서경대 교수), 「남북역사학자간 교류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95 회담사무국 위촉과제)〉

다. 남북학술교류의 특성

- 지금까지의 남북학술교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음.

정부의 적극적 관여와 후원이나 남북간 협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제3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 남북간 추진주체가 있어 남북간에 합의된 목표·주제·방법을 가진 본격적 학술교류가 되지못하였다는 점
- 북은 우리의 흡수통합이 두려운 나머지 폐쇄적·소극적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점
- 북은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외부의 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사상적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 아직도 정치·군사적 대결구도이며 남 또한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 대부분의 학술교류가 소위 진보세력과 재야 및 대학운동권 학생과 연계되어 추진된 면도 없지 않았다는 점
- 북의 대남전략 목표는 남북체제대결 양상을 띠고 있으며 평화공존 노선보다는 그 비중을 대남혁명 노선쪽에 두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임.

<신윤표(한남대 교수), 「한국에서 본 남북교류의 가능성과 한계성 (숭실대 세미나, '95. 10. 5)>

라. 남북학술교류를 통한 기대과제

- 남북학술교류는 한민족공동체의 민족역량 증대, 남북공존 협력의 힘을 통일문제를 푸는데 기여토록 함으로써, 남북한의 경제통합,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추진 및 관광권 개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자원보유에서 인적·물적·제도적·정보자원 등을 생각할 때 통합된 민족단위로서 인적구조의 근대화를 가져오는데 공헌하게 되며
 - 안보일변도가 아닌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다차원화 외교측면과 21세기에 전개될 수 있는 지역협력외교를 통하여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될 것에 대비하면서 통일지지를 획득할 수 있으며
 - 남북 경제공동체(economic union)가 갖는 동태적 이익이 생기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의 노동과 토지가 합쳐 새로운 경제활력이 커질 수 있고 남북이 단일경제권을 이루어 한반도경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되도록 할 수 있으며
 - 협력분야의 선정 및 과제 도출이 가능하고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과제의 타당성 분석, 조사, 자료교환이 가능하며 해양, 수산, 환경, 농축산 및 임업분야, 전자, 컴퓨터통신, 자동차 조선의학, 원자력, 생태조사 등 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대안을 만들 수 있고

- 건강한 국토, 미래지향적 국토통합의 기본명제를 달성할 수 있음.

〈신윤표, 「한국에서 본 남북교류의 가능성과 한계성」〉

마. 남북학술교류의 단계별 실천방안

- 이제까지 남북 학술교류에 있어 북한은 주로 민족사적 정통성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우리의 경우 학문자체에 비중을 두어 연구의 폭을 넓혀 왔음.
 - 북한은 줄기를 정하고 틀에 맞춰 연구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 연역적 방법인 반면
 - 남한은 다양하게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귀납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광복 5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민족 동질성의 뿌리 찾기를 위해서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바탕 위에 동일 목적을 설정하고 나아가야 하리라고 보며, 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제1단계는 자료교환 단계인데, 이것은 남북분단 이후 지금까지 각자 문화유산을 어떻게 조사해 왔는지 알기 위

해 분단 후 간행된 문화유산 조사보고서, 발굴보고서, 정기간행물, 단행본 나아가 발굴 유적·유물의 사진, 슬라이드 필름, 기록영화 필름, 실측도, 비디오 등의 상호 교환을 들 수 있으며

- 제2단계는 인적교류 단계인데 1단계 자료 교환이 빨리 이루어져 서로 상대방의 자료를 검토하여 상대방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현황 조사를 위한 인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 제3단계는 물적교류 단계인데 남북 상호의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교류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공동전시회를 마련하여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일반에게 제공토록 하여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제고토록 하며
- 제4단계는 공동조사 단계인데 앞의 3단계가 충족됨으로써 가능한 것으로 상설공동연구기관을 두어 조사대상 유적선정, 조사계획 작성, 실지조사를 상설화함으로써 최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

<조유전(국립민속박물관장), 「남북학술문화교류에 대한 제언」 (일본국제 학술 심포지움, '95. 8)>

바. 남북학술교류 증진방안

- 남북한간의 학술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각 학술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쪽에서 먼저 제안을 내놓아야 함.
 - 북한에서는 정치적 배경과 사회적 현실의 변화에 따라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측에서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 우리는 먼저 북한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해야 하고
 - 그러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자료에 대한 과감한 개방과 자료실의 완비가 우선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법적 보장도 중요함.

〈서길수, 「남북역사학자간 교류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 학술교류를 포함한 남북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이 시대와 역사를 사는 우리의 존재가치이고 유일무이한 명제이기때문에 이제는 통일을 위한 적극적 활동사업의 전개·연대가 필요함.

- 통일과제를 해결해야 할 방법론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남북은 공유해야 함.
- 이를 위해 학술교류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우리 모두는 통일을 향한 발상의 전환과 행동이 뒤따라야 하며
 - 「남북민간학술교류추진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 남북공동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남북관계자·학자, 세계한민족공동체 구성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학(Korean Studies) 연구회」(가칭)를 설립해야 하며
 - 남북 정부당국자간의 교류협력의 진전과는 상관관계를 갖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재정적 지원책을 수립하여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
 - 남북비교연구에 관한 저변인구의 확장을 돕고 대학이 보다 적극적 중심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국책차원에서 「남북연구소」나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토록 권장하며
 -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과 연계시켜 매년 1대학 1과제를 한국학 과제로 책정하여 연구산물이 나오도록 정책화해야 할 것임.

〈신윤표, 「한국에서 본 남북교류의 가능성과 한계성」〉

2. 남북 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

가. 남북간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 남북통일에 관련된 논의가 정치중심에서 문화적 논의를 포괄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로써, 이의 배경에는 국내외적인 여건변화가 작용하였음.

- 국내적으로는 남북통일 작업이 정치적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며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교류가 빈번해졌으며

- 국외적으로는 1990년 통일을 이룬 독일이 흡수통일 이후에 엄청난 문화적 마찰로 힘겨워하는 사태를 보게 되면서 생긴 새로운 자각이 있었음.

- 두개의 다른 사회체제속에 살던 '민족' 성원이 만나면서 빚어지는 비극은 실은 이산가족 찾기 이후에 사건들이라거나 연변교포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처음 만난 기쁨과 감격이 가신 뒤에 서로간의 기대수준의 차이와 의사소통이 빚어낸 오해로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하는 이산가족들이 있으며

- “조국이 조선족을 무시”한다고 비관자살한 사건들을 통해 남북이 문화적 통합을 준비하지않은 상태에서 만날 때 예상되는 갈등과 불행을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음.

- ※ 이미 한국의 기술자가 북조선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직접적 만남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음.
- 현재 문화적 동질성에 관한 논의는 대개 그 결론이 그나마 공통점이 남아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문화적 동질성” 확대를 통해 통일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

〈조혜정(연세대 교수),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 (연세대 심포지움, '95. 11. 18)〉

나. 남북간 문화적 상황의 비교

- 북한 문화의 특성을 토대로 남한의 문화적 상황과 비교하면 다음 몇가지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반면, 북한은 획일화된 문화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 ※ 남한의 경우는 순수예술로부터 참여예술, 전통적인 문화부터 급진적 문화, 보수주의적 예술부터 실험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문화가 지향하는 바도 상이하나 북한에서는 체제의 유지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의 문화예술만이 허용

- 창작의 주제에 있어서 남한에서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문화·예술창작은 특정 집단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 남한에서는 문화체육부가 문화·예술활동에 관여하고, 공연윤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문화·예술활동에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지만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는 양식은 간접적이거나, 북한에서는 작품의 창작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당이 직접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통제하고 있음.
- 또한 남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영향을 받고, 사회가 예술에 영향을 주는 상호관계(reciprocal relationship)가 설립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북한에서는 예술이 사회에 종속되는 정도가 심하며
- 남한에서는 매스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외부사조의 유입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북한의 문화는 폐쇄적인 체제의 특성상 외부사조의 변화에 둔감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어 남한은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되나 북한은 작품의 감상이나 수용이 비교적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 남한에서는 문화활동이 여가의 일종으로 인식되지만 북한에서는 여가생활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활동이 되고 있다

는 점과

- 이밖에도 문화의 수용능력, 문화의 확산정도, 문화장르 등 여러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남북한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평가할 적합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용이한 것은 아님.
- 남한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으며, 새로운 문화에 적응력이나 흡수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문화의 상품화, 외래사조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민족문화의 퇴조, 문화의 파편화가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비해 북한은 비교적 균등한 문화의 수용, 민족문화의 적극적인 유지, 통합기체로서 문화를 중시하는 사회적 관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문화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도구화하고, 문화의 획일화를 강조하며, 강제적으로 인민들에게 문화를 수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이우영(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국민대 세미나, '95. 11. 3)>

다. 남북 문화통합의 방향

- 사회·문화적 차원의 남북교류정책은 반드시 정치적 접근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족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탈정치적 접근'을 모색할 때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현실적으로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당국과 민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며 이론적 관점에서도 '기능적 분화'가 요구되고
- 당국이 아무리 순수한 인도적 차원을 강조해도 그것은 '정치적'일 수 밖에 없음.
- ※ 에컨대 음악, 미술, 전통문화, 고고학이나 어학 등 상대방이 호응함으로써 당장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 통일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정부가 단일 창구를 고집하지 말고 서울이나 평양 등지에서 문화인들의 만남에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서로 다른 기능체계인 남북한 사회는 서로 각각의 자율성, 조직적 폐쇄성과 차이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일치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 한반도의 전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함.
- 지난 50년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매우 다른 두 사회의 이질성을 통합시키고자 한다면 우선은 우호적 접근과 교류를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임.
 - 교류나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한 역시 실질적으로 탈냉전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며
 - 이는 남북 모두의 민족역량과 각 체제 속에서 축적해 온 역사적 경험을 편견없이 결합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임.
 - ※ 동서독의 경우를 남북관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으나, 유추적으로 남북한은 단계적으로 “상호의존” 관계에서 “통합”의 관계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상정가능
- 50년동안 서로 분단되어 흘러간 남북한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의 역사로 해석할 것이며, 그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는가는 바로 오늘에 있어서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에 앞서 제기되는 문제임.
 - 50년전 광복과 해방의 순간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오늘날 남북한의 통일에 앞서 제기된다는 사실은 과거의 극복이 얼마나 어려우며 역사로부터 도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

○ 남북한 당국자간의 문화협정 체결전이라도 민간차원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개별적으로 상대방의 문화예술에 대한 비판보다는 남북한의 문화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야를 문화교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 민간차원에서 “북한문화정보센터”를 만들고 북한문화예술인 인명사전을 출판하는 작업을 계기로 문화예술의 교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실질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 이질적인 가치관과 생활관의 차이로 나타난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단이후 북한사회와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결국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방향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끈질기게 반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민간과 정부당국 모두가 교류를 제도화하고 장래화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사회문화적 교류의 제도화와 장래화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사회·문화적 통합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남북(정주대 교수), 「통일환경의 조성파 남북사회·문화교류」

(배재대 세미나, '95. 11. 9) >

- 통일한국의 문화통합은 근본적으로 통일의 방식과 통일 이후의 사회체제의 성격에 좌우될 수 있음.
 - 어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흡수된 지역의 문화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극복의 대상이 될 것이며
 - 흡수의 주체가 되는 지역의 문화가 통일한국의 주문화(mainculture)로서 문화통합을 주도할 것임.
- 어떠한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지든 통합이라는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문화통합을 자유경쟁과 같은 시장원리에 맡길 경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문화통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통합이 의미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하위문화들의 연결성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하며
 - 통일한국의 이념체계에 적합하고, 통일한국의 생산양식과 배치되지 않는 통일문화의 기본 방향이 정립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문화의 성격을 규정한 다음 문화통합이 추진되어야 하며
 - 문화통합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적절한 분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하는 노력도 필요함.

- 이밖에도 문화수용을 위한 수단을 공정하게 완비하는 문제, 분단 시기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문제, 통일 이전에 문화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끝으로 가능한한 동질적인 문화요소를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이질적 요소들을 동화시키는 과정을 밟는 것과 기존 문화에서 극복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청산하여야 함.

〈이우영, 「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

라. 남북 문화통합의 전망

- 문화적 차원의 남북통일은 내부의 이질성과 갈등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힘을 길러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함.
- 우리의 삶을 지대한 영향력으로 지배해 온 약육강식적 민족주의를 해체하고 탈식민지적 근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하며
- 이는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방향이 아니라 더욱 중심에 집착하는 획일주의 사회로 진행되어온 그 동안의 역사적 진행, 특히 분단체제가 낳은 문화적 특징에 대해 알아가야 함을 뜻함.

- ※ 남한에서 일고 있는 문화적 논의는 주로 분단 이전의 공통성을 강조하거나 단절로 인한 이질성을 강조하는 “동질성의 확대”라든지 “이질성의 극복”이라는 단어로 나뉜.

〈조혜정(연세대 교수), 「남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연세대 심포지움, '95. 11. 28)〉

- 어떻게 이질화된 남북문화를 민족정통성에 입각한 통일민족문화로 조성해 가느냐는 대명제를 놓고 우선 철저하게 정치이념으로 무장된 북한 문화와 부단한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민족문화속에 적절하게 용해시키는 문제가 제기됨.
 - 이는 통일 이후 남북 쌍방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역기능적 갈등현상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며
- 또한 남북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상호신뢰와 동질성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시에 사회문화적 제도의 적응능력과 변화능력을 끄집어 내어 이를 전략적 학습능력으로 개발시키는 작업도 요구됨.
- 반세기의 분단으로 굳혀진 남북사회의 이질화를 초극하기 위한 작업은 앞으로 다방면, 다차원에서 끈질기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분단 반세기 동안에 형성된 북한사회의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제기됨.

※ 당성, 계급성, 이념성에 오염된 문화와 그러한 오염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문화를 구분한다는 것은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작업이며, 독일에서는 옛 동독인의 그러한 통일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1945년부터 설립하여 여·야당이 초당적으로 운영해 온 “정치교육 연방센터”가 따로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옛 동독 각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

○ 북한주민이 통일후 한민족 공동체의 문화속에서 되도록 적은 충격을 받고 통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들을 위한 정치·문화·교육 프로그램같은 것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것임.

- 통일된 한민족 공동체의 문화가 분단시대의 그것보다 훨씬 풍요로운 것이 위해서는 가급적 다양하고 다원적인 문화를 포용하는 개방적이고 전향적인 입장이 요청됨.

<이남북, 「통일환경의 조성과 남북 사회·문화교류」>

○ 문화통합은 통일한국의 공동체형성에 필요불가결한 요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까지 충족시켜 주는 것은 아님.

- 정치경제적 통합이 동반될 때 문화통합이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문화통합이 이룩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이룩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문화통합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정치적 수단으로 인식하였던 북한식의 사고와 문화를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여겨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던 남한식의 사고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함.
 -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가 없다면 통일한국에서의 문화통합도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에 압도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 문화통합은 통일이후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 과정은 분단 상황인 현시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일이후의 바람직한 문화는 현재에도 바람직한 문화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작업과 현재 남한의 문화를 바람직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문화통합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임.

〈이우영, 「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

3. 동서독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

가. 동서독간의 사회문화교류 선례

- 동서독간의 사회문화통합은 1990년 10월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87년부터 출발하였음.
 - 이후 상호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1989년 11월초 동독의 장벽이 붕괴되고
 - 동서독 정부간에 어느정도의 “간격”을 두고 연방제를 통한 독일통일 운운하며 동독이 1990년 3월 18일 총선에 임할 때까지도 동서독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협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
- 1990년 10월 독일통일 이후에 시행되고 있는 동서독 사회문화 통합은 비교적 잡음은 있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어 통일이전에 사회문화교류협력이 독일통일에 하나의 촉매제가 될수 있었고, 통일 이후에는 역으로 통일조약의 내용적 충실이 사회통합을 촉진하였음.
 - 동서독 사회, 문화교류협력은 통일 이전 경제, 교육, 환경 등의 분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있었고
 - 통일이후에는 더 말할 것 없이 단지 이 연관성 중에서만 사회통합이 가능하였음.

- 1989년 11월 동서독 접근은 종래의 교역을 통한 접근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접근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사회문화적 접근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동서독간의 접근이 동독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
- 동서독은 상이한 체제를 유지했지만 상호간의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과 15조에 이르는 문화협정을 1986년 5월 체결하였음.

나. 독일통일과정의 특성

- 동서독 통일은 독일국민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이 될 때까지도 동서독 사회 문화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음.
- 이때문에 독일통일 실현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사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음.
-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전 동서독은 전후 장기간의 경제·인적교류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1987년에 시작된 일련의 문화협력은 1989년 11월 동독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도 계속되어 통일독일에 있어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포석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
-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사회·문화의 이질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었음.

나.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 통일후 동서독 국민들간 가장 힘든 통합의 하나가 서로 다른 체제에 익숙한 탓에 상대를 이해하기 힘든 심리적 갈등이었고 사회·문화에서의 통합은 제도적·제정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진다면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야 제위치를 찾을 것으로 보임.
- 독일통일에서 본 바와 같이 상이한 경제·사회체제가 통합하기 위하여는 단계적으로 유연한 접근을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경제적·제도적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보았음.
- 결국 두 체제가 통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절실했음.
- 서독이 동독의 사회주의경제·사회문화체제를 변형·발전시킨 것을 교훈삼아 우리도 차분히 북한체제를 변형시킬 계획과 대안 개발이 절실하다고 보며 그 교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북한의 체제도 동독체제, 특히 북한은 동독의 높은 산업기술과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동독과 관계를 유지하여왔기 때문에 북한사회체제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 1989년 11월 동서독 접근은 종래의 교역을 통한 접근 이외에 다른 형태의 접근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사회문화적 접근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으며, 동서독간의 접근이 동독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
- 동서독은 상이한 체제를 유지했지만 상호간의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과 15조에 이르는 문화협정을 1986년 5월 체결하였음.

나. 독일통일과정의 특성

- 동서독 통일은 독일국민들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이 될 때까지도 동서독 사회 문화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음.
- 이때문에 독일통일 실현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서보다 사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음.
-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이전 동서독은 전후 장기간의 경제·인적교류를 실시해왔으며 특히 1987년에 시작된 일련의 문화협력은 1989년 11월 동독의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도 계속되어 통일독일에 있어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포석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
- 그 과정에서 상호간의 사회·문화의 이질감이 어디에서

○ 끝으로, 앞으로 있을 종교인들의 방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은 방북 신청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그 욕구와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방북지침」(가칭)과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종교인의 방북과 기업인의 방북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

- 종교인의 방북은 기업인과 비교해 볼 때 그 성격이 아주 상이한 것으로 기업인의 경우는 기업의 이윤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종교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임.

<고태우, 「남북종교인 접촉전망 및 당국간 회담 유도방안」>

○ 대북 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욕심을 앞세워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한진주의에 매몰되거나 교파주의적 분열상을 노정시켜 혼돈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음.

- 남북한 종교교류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교세확장을 목표로 삼거나 교세를 과시하는 경쟁적인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동독의 사회문화체제의 변화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 나아가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남북한 사회·문화통합 시나리오를 작성, 논의해야 될 것임.
 - 동독은 공산권내에서 가장 강한 경제국, 기술국으로 자부하면서도 서독과의 교류를 주저하고 싫어했고, 북한 역시 그 형태와 내용은 다르나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망설이고 있음.
 - 이러한 경험을 감안하여 본다면 북한이 아무리 주체사상을 고수한다고 해도 남쪽의 번영을 끝까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 남한은 북한의 주민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남한체제의 우월성을 꾸준히 알려야 되겠음.
- ※ 1980년 후반에 들어와 동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서독에 비해 얼마나 저조한 것인가를 통감하면서부터 비로소 1987년에 서독과 사회문화협력협정을 맺게 됨.

라. 결 론

- 결국 사회·문화의 역사적 진보성을 외면할 수 없는 북한은 동북아세아 및 남한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사회·문화협

력관계를 찾을 것이 예견됨.

- 동서독 과학기술 통합은 근본적으로는 1987년의 사회문화 교류협정 등으로 불씨를 텃으나 동독의 사회문화체제의 현주소는 통일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 남북한의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접촉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북한은 “과장된 체제우위론, 위장된 평등론”을 과시할 것임.
- 그러나 북한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빈곤의 평등화 사회로 모든 분야에서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진성을 갖고 있다고 함.
-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있어서 서서히 분야별로 교류, 협력을 전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며
 -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인내를 바탕으로 남한이 북한으로 일방통행 형식으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전하는 방법에 총의를 모아야 될 것임.

〈김성윤(단국대 교수), 「동서독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 '95 회담사무국 위촉과제〉

Ⅲ. 언론분야

1. 남북언론교류 문제

가. 남북언론교류의 특성

- 남북 민간교류 가운데 우선 생각되는 것은 언론의 교류일 것이며, 이 부분은 민간교류이기도 하면서 정부적인 차원의 정책을 떠나서 존재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실제 정부차원의 교류가 있을 때 거기에 수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의 교류이며
 - 이미 가장 많이 접촉·교류되고 있는 것이 이 분야라고 할 수 있음.
- 그간 남북한 회담의 대표들이 번갈아 서울과 평양을 왕래할 때나 적십자대표들의 왕래에 동반한 것이 바로 언론인들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음.
 - 심지어 남북휴전협정에 따라 개최되는 판문점에서의 남북간 접촉에서 늘 국외 참여접촉자는 남북의 언론인이란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음.

나. 남북언론교류 문제의 제기

- 남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8년 이후에 북한 방송의 중계 혹은 개방의 필요성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음.

「언노련」을 중심으로 남북 기자교류 주장도 제기되었고

북한 방송의 자유청취를 주장하는 정치인이 나온 것도 바로 이러한 추세의 반영이었으며

언론의 속성이 사실 보도이고 비판이기 때문에 선전·선동의 효과를 도외시한 언론교류를 상정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측면도 있음.

- 일방적인 언론개방이란 것은 바로 적군 앞에 무장해제 상태로 있겠다는 보장이나 마찬가지로란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북민간교류활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 진전시켜야」 (월간 『전망』, '95. 7월호)〉

다. 통일지향적 언론의 역할

- 대내적 측면으로는 통일에 대한 인식적 측면과 국민계도,

가치합의 도출 측면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약될 수 있음.

- 통일에 대한 인식적 측면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개념정립을 비롯하여 분단상황과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바로 심어주는 일이며
 - 국민계도적 측면을 보면 언론은 국민의 통일관 및 북한관 등에서 혼란과 오류를 방지하고 올바른 판단을 선도하는 사회교육적 기능을 담당해야 하며
 - 가치합의 도출 측면은 통일문제 인식의 확립을 바탕으로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국론의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임.
- 대외적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은 이제까지 적대적 관계로 규정되어 왔던 남북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전환시켜 화해 및 협력에 대한 기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임.
- 통일이란 일방적 흡수가 아님을 전제한다면 통일지향적 언론의 역할은 우리의 언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언론에도 해당되며
 - 북한언론의 변화를 맹목적으로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남한의 언론매체들이 먼저 통일지향적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황경숙(한양대 방송계장), 「통일지향적 언론의 역할과 과제」(월간 『북한』, '95. 3월호)>

라. 남북대화시 언론의 문제점

- 작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과 함께 국내언론은 연일 그에 관한 기사로 채웠으나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김일성주석」으로, 또 어떤 언론기관에서는 「김일성」으로 표기해 국민의 역사 인식에 혼란을 초래했음.
- 심지어 같은 언론매체인데도 어느 날은 주석으로 부르고, 어느 날에는 이름만을 적었으며
- 주체사상에 관해서도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한 채 은근히 김일성을 미화하는 느낌마저 주기도 했음.
- 이같은 가치의 혼재상태는 남북회담시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이 혼란된 감정을 털어버릴 수 없게 만들었으며 언론에 내재하고 있는 그같은 가치의 혼재는 남북대화에 진전을 유도하기 보다는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더 큼.
- 국내언론은 북한에 대한 비전문가적 입장인 데다가 사전지식의 부족으로 급격한 변화 등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대화 취재에 나섬으로써 사태를 적절히 분석하지 못했음.
- 북한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대남적화에 초점을 맞춰 남북대화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때로는 동상이몽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그들의 또다른 행동의 전초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음.

- 국민이 남북대화나 통일에 대해 혼란의 감정을 갖는 것도 정부가 냉전적 논리로 북한 실상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된 견해를 국민에게 제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언론이 북한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그 주된 이유는 국내언론이 비전문적 입장에서 사전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데서 연유함.
- 김일성 사망 이후 국내언론은 「김평일 망명」 및 「김정일 건강악화설」, 「강성산총리 실각설」 보도 등 근거없는 조작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대내, 대외적으로 혼란을 야기시켰음.
 - 남북대화가 결렬되었을 때 국내언론은 그 원인 분석에서 걸땀하면 북한 지도부내의 알력 다툼으로 돌리고, 군부의 강경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했으나
 - 이러한 보도 역시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추측기사에 불과하였음.
- 북한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정보의 확인이 곤란하며 오보나 추측기사를 내보낸다고 해도 직접적인 항의가 없다해서 보도량을 늘리는 것이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음.
 - 이러한 보도관행은 언론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것이 반복될 경우 언론에 치명적 상처를 안겨 줄 수도 있는 것임.

- 언론사내에 냉전논리에 젖은 젊은층이 상당수 투입되어 통일이나 남북대화 보도에서 흥비위주의 기사를 취급하는 경향이 많아 국민들로 하여금 미신을 신봉하게 만드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음.

〈김도영(방송작가), 「남북대화시 국내언론의 역할과 문제점」, '95 회담 사무국 위촉과제〉

마. 동서독 언론의 사례와 그 교훈

- 서독의 언론이 통일의 초석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인들의 노력과 함께 전파매체를 충분히 활용했기 때문임.
 - 서독 방송은 동독의 시청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는지를 고려해 서독의 체제까지도 서슴없이 비판하고, 이념보다 객관적·사실적 보도를 지속했고
 - 이 때문에 동독인들은 동독방송보다 서독방송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통일의지를 갖게 되었음.
- 지금처럼 남북이 내치된 현 상황속에서 언론교류는 환상적인 꿈과 같으나 세계적인 환경은 급격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만 과거의 논리가 영구히 존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특히 중요함.

- 한국언론은 과거의 페러다임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보도 페러다임을 모색해야 하며
 - 새로운 보도 페러다임은 바로 냉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민족의 시각에서 대북보도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차원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 그 구체적인 예가 바로 취재원에 대한 접근을 폭넓게 허용하고, 상호 인적·물적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의 개선임.
- 독일통일과 언론의 역할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인내를 가지고 북한이 개방할 수 있는 정책과 보도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임.
- 남북통일을 위해 언론은 한편으로는 보도를 통해 남북이 긴장완화 및 상호교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도록 유도하고
 -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이 직접 남북이 교류하고 언론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김택환(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독일통일과 언론의 역할」
(회담사무국 세미나, '95. 5. 26)>

바. 통일지향적 언론의 과제

<언론내부적 과제>

○ 대북관련보도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통일관련 및 남북관계 보도시 남북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지 이중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 고정관념적 시각에서 비롯되는 보도의 획일성과 한계성에서 탈피하고
- 반복이데올로기적인 냉전논리나 체제우위적 인식의 틀에서 탈피해야 할 것임.

○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언론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과학적·논리적 안목을 갖추어야 하며

한반도의 분단상황과 이의 극복을 위한 언론철학을 탐구해야 하며, 민족적 장래에 대한 일종의 투철한 사명감도 요청되며

-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에서 대중영합적 상업주의, 선정주의에 흐르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보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켜야 하며

- 언론인은 정부의 통일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 대하여 항시 감시와 비판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며, 남북의 통일정책 및 방안을 역사적 맥락과 사회과학적 논리로 파악하고 해설할 수 있어야 함.

○ 내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음.

- 현재의 북한 및 통일관련 기사나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물을 기획, 제작할 때에는 우선 주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그 전제하에 체계적인 내용을 일관성있게 다루어야 하며
- 북한 및 통일관련 보도물의 포맷을 계속 개발해가야 함.

○ 이밖에도 북한에 대한 직접 취재가 불가능하고 정보원이 관급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현 관련조직을 전문화해야 할 것임.

<언론외부적 과제>

○ 언론이 통일문제에 적극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통일언론정책이 필요함.

- 이 정책은 언론자유를 폭을 넓히고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보장하여 책임있는 보도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며
- 법적·행정적 제약요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우선 이루어져야 함.
- ※ 북한에 대한 각종 자료개방폭의 확대와 함께 남북한 당국자간에 오가는 정보가 기밀사항이거나 공개됨으로써 현저하게 국익이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내용이 아닌 한 공개되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북한동향에 대한 정례 브리핑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남북한 언론의 자유취재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함.

〈황경숙, 「통일지향적 언론의 역할과 과제」〉

사. 개선방안

- 남북대화시 국내언론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 국내언론은 전문기자를 양성해야 하며
- 국내언론은 남북대화시 언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북한

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자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들이 정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 국내언론은 남북대화시 우리 정부의 전략을 사전에 노출 시켜서는 안될 것이며
- 그밖에도 남북대화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인 통일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며, 가장 절실한 민족적 사업임을 염두에 두고 선정적 보도, 오보, 추측기사 등을 지양해야 할 것임.

〈김도영, 「남북대화시 국내언론의 역할과 문제점」〉

2. 남북방송교류 문제

가. 문제의 제기

- 남북관계를 좀더 원만하게 만들고, 양측 주민들이 상호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통일 후에 발생할 부작용을 생각할 때 방송을 매개로 한 남북교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됨.
- 남북방송교류 문제는 다른 어떤 것 보다도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이며, 남북방송교류와 협력은 결국 북한방송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정권의 존립과도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 그럼으로 북한현실을 무시하고 선불리 이리저리한 제의를 하는 것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 오히려 상호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음.
- 그동안 남북방송교류는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대부분이었음.
 - 그럼으로 남북한 방송교류와 협력은 독립변수라기 보다는 종속변수라는 점을 인정하고
 - 과연 방송이 남북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임.

- 남북 사이의 방송 현실이 보여주듯, 남한지역의 주민들도 그리고 북한지역 주민들도 상대방 방송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방송에 의한 관계개선이나 방송의 커뮤니케이션적 이해 기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양체제의 정치적 결정때문임.

〈김승수(전북대 교수),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할과 과제」 (전북대 세미나, '95. 11. 9)〉

나. 북한의 방송과 그 선전적 특성

- 북한은 3개의 TV방송국(조선중앙 TV, 만수대 TV, 개성 TV)과 조선중앙라디오, 평양라디오, 평양인민 FM 그리고 구국의 소리방송 등 4개의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음.
- 북한은 신문에 의한 선전과 방송에 의한 선동 및 주민동원을 방송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라디오 방송의 특징을 갖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엔 무선 방송보다 제3방송으로 알려진 유선 라디오방송(엠프)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주민이 언제나 라디오 방송의 선동에 노출되어 있으며
- ※ 유선방송은 평양에서부터 각 도·시·군·리까지 연결돼 공

장·협동농장 등의 유선방송시설을 경유, 각 가정의 스피커로 흘러 나오게 되어 있음.

- 채널이 대부분 봉인되어 있고, 집단청취가 많이 이루어 지며

남한의 방송망이 중·소출력으로 구성됨에 비해 북한 라디오 방송시설은 대부분 고출력(150-1000KW)이며

- ※ 남한의 KBS 대외방송인 사회교육방송만이 500-1500KW의 대출력으로 방송

- 북한 개성 북방의 마식령산맥, 별악산맥이 가로 놓여 있어 남한은 사회교육방송을 제외하고 대북선전프로그램을 제작·송출하지 않음에 비해, 북한은 조선중앙라디오를 제외하곤 모든 라디오 방송이 대남·대외선전방송의 성격을 갖고 있음.

<방정배(성균관대 교수), 「남북관계와 전파(방송)통일의 의미」(성균관대 세미나, '95. 11. 3)>

다. 남북방송교류의 경과

- 남북한 교류가 정치적 이유로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방송교류도 그러하였음.

- 남북한이 고도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방송교류가 있었고
 - 또 목적이 종료되면 원위치하였던 것이 그 역사였음.
- 분단이래 남북한 방송교류의 역사적 흐름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 참조)
- 고위급회담, 국회회담, 적십자회담과 같은 각종 회담을 취재하는 방식
 -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와 같은 스포츠를 상호중계하는 방식
 - 북측은 중계하지 않았지만 사할린이나 연변에서 이벤트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남측이 이를 중계하는 형식
 - 소극적이지만 남측이 북한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임의로 녹화하여 방송하는 방식
 - 쌀 회담 같이 제3국에서 열리는 회담을 비공식적으로 취재 보도함으로써 방송하는 것등이 있음.

(표 *) 분단이후 남북방송 교류의 흐름

날 짜	제 의 자	내 용
'57.5	북한언론계	기자 교류, 출판물의 전송사진 및 기록영화 필름의 교환 제의
'60.	북한 최고인민회의	언론교류 제의

날 짜	제 의 자	내 용
'72. 11	남한(남북조절위원회 평양회의)	비방 방송 중지의 제의
'73. 6	남한(남북조절위원회 서울회의)	언론교류 제의
'82. 2	통일원장관	20개 시범실천사업 제의 모략방송 장치제거, 방송시·청취 장애물 제거 양측 기자의 자유 취재 제의
'88. 9	남한	북한 언론자료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개 제의
'89. 1	프로듀서 연합회	남북한 방송프로그램 교류, 상호인 론인 방문 진짜 교류, 프로그램 공동제작의 제의
'89.	김대중 평민당 총재	남북한 텔레비전, 라디오 상호개방 의 제의
'89.	KBS 노동조합	대북 비난 방송중단, 자율적인 방송 개방
'90. 8	KBS 사장	이산가족방송, 자연생태계 프로그램 의 공동제작의 제의
'90. 9	남북한	남북한 통일축구대회 생중계
'91. 5	남북한	세계청소년 축구대회 생중계
'91. 7	노태우 대통령	남북방송 교류 및 방송개방 제의
'91. 12	남북합의서	종합적인 언론교류의 제의
'92.	김영삼 민주당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라디오 상호개방 및 교류 제의
'95. 5	남한 「언노련」, 기자협회, 프 로듀서 연합회	남북 언론인 대표의 대화제의

〈김승수,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할과 과제」〉

라. 남북방송교류 및 보도의 문제점

〈가치의 혼재상태가 남북관계 혼란을 부채질〉

- 작년 8월 8일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한 후 언론은 한때 매일같이 그에 관한 기사를 대량으로 보도했으며, 아마 한 사건을 두고 하루에 이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한 것은 해방 후 처음 있는 일이었음.
- 이러한 가운데 언론속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의 혼재상태는 남북관계에 진전을 가져오기 보다는 혼란만 부채질하였음.

〈현재-미래(진보) : 과거-현재(보수)〉

- 조문 논쟁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시각을 ‘현재와 미래’에서 ‘과거와 현재’로 바꾸어 놓았음.
- 언론이 현재 이후를 중요하게 보느냐, 현재 이전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 보도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으며
- 반면에 현재 이전을 중요시하는 시각은 과거의 청산을 전

제로 하는 보수적인 시각이 될 것임.

<검증되지 않은 보도 경쟁>

- 김일성 사망 이후의 언론보도를 되돌아보면 대부분의 오보는 '김평일 방명'에 국한되지 않았고, 모주간지의 '강성산 총리 실각설', 또는 김정일에 대한 여러가지 건강 악화설, 지도부 내의 불화설 등 검증되지 않은 보도들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음.

- 이는 북한보도에서 정보의 확인자체가 곤란하고, 오보를 한다해도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항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쓰면 이득(쓰면 득이 된다고 하는 의미)'이라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는데 기인하며
- 결국 독자로부터 신뢰를 떨어뜨려, 그것이 반복될 경우 언론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것임.
- 이밖에도 북한·남북관계 보도에서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예정稿'가 의외일 정도로 많은 점임.

<한쪽 정보에만 의존>

- 우리 언론은 지난 3년여에 걸친 북한 핵문제 관련 보도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정보에만 의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오보를 양산해 왔음을 부인키 어려움.

〈정진석(한국외대 교수), 「북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언론인회 세미나, '95. 11. 16)〉

- 북한보도에 관한 한 남한언론은 당국과 체제의 논리에 따라 대결적이고 부정적 시각에서 보도하도록 제약당하는 선전기구로서의 역할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보도는 북에 대한 인식왜곡과 오해·불신 등의 남쪽국민들의 의식 왜곡으로 연결되어 왔음.
- 남북한간의 언론생산물 교환, 언론인의 상대방지역 취재·보도·송출, 프로그램 공동제작·공동생산·공동방영, 상주 특파원의 교환, 상대방 프로그램의 시청취 등을 포괄하는 남북한 언론교류의 제도화에 큰 걸림돌로 등장된 것이 남한 언론의 이데올로기적 보도文法(mood)의 문제였음.
- 북한보도에 관한 한 남한방송은 아직 決定論的 모델에 안주하여 정치적 도구로서 그리고 이념적 선전방송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에 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과 주장과 비판을 국가권력이 중재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의 권력이기주의적 관점과 통일관을 비추고 홍보하는 역할을 방송이 수행하고 있음.

〈방정배, 「남북관계와 전파(방송)통일의 의미」〉

마. 동서독 방송통일과 그 시사점

- 동서독 방송통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하고 또 남북한 관계 변동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양 체제의 대립과 고도의 긴장대치관계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이질성과 차이에서 유래되고 정치적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이 대립·갈등 관계의 변동이나 개선은 정치·외교적 타협과 합의에 의존한다는 점
 - 적대·대립관계의 병존·공존으로의 관계개선 과정에 체제의 이질성과 동시에 우월성이 시위되고, 우월한 체제에 의해 관계구조변동의 이니셔티브가 행사될 수 있다 (접촉을 통한 변화)는 점
 - 체제의 이질성이란 하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를 의미하고,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요, 그것은 상대방체제에 비해 더 개방적, 더 큰 개인자유, 더 인간적인 것을 포괄하는 “민주성”을 의미한다는 점
 - 상대방 체제수호와 안정화에 기여하는 접촉과 교류라는 전제에서만 우호적인 관계지속과 관계발전이 가능하다는 점 (비통일 보장)
 - 체제우월성이 시위되고, 우월한 체제가 관계구조변화의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양 체제의 관계는 개방체제 vs. 폐쇄체제, 자유체제 vs. 억압체제, 민주지배 vs. 독재지배, 언론의 경우 다양한 의견과 주장의 스펙트럼을 가지는 보도 vs. 하나의 독단적 이데올로기성 보도, 객관보도 vs. 비방보도, 형평적 보도 vs. 일방적 보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는 점

- 체제우월성(민주성이 기준)과 언론 페러다임의 우월성은 동전의 양면같이 분리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보도의 우월성은 열등한 언론보도가 행해지는 체제와 주민을 개방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월한 체제와 언론을 동경하고 선택케 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 등임.

〈방정배, 「남북관계와 전파(방송)통일의 의미」〉

바. 남북방송교류를 위한 몇가지 제안

- 가장 비이념적일 수 있는 방송기술자들의 상호교류와 기술협력이 실현된다면 상호 기술발전의 현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이에 기초하여 기술공동체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방송기자제가 대부분 일제 아니면 독일제인 것을 감안하면 남북한이 기술자교류와 기술협력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양측 '기술종속'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남북의 방송언어의 분제점과 이질화에 대하여 공동조사하고, 남북 방송언어의 공통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아나운서의 교류를 제안함.
-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공동판매를 해야 함.
 - 구체적으로는 NTSC-PAL 겸용의 텔레비전 수상기의 공동 생산과 공동보급, VTR의 공동생산과 공동보급, 위성방송 수신기의 공동보급 및 공동판매, 방송 송신 설비의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이 있음.
- 민족 공통의 과제이면서도 이념적·정치적 색채가 가장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남북방송이 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를 갖고 국제시장에 나가야 할 것임.
- 남북한 공히 올바른 오락문화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텔레비전용 영화·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하고, 궁극적으로는 오락프로그램까지 공동제작해야 함.
- 남북한 양쪽에서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을 선정하여 공동의 민족 인물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함.
 - 정약용,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위인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그려 민족적 자긍심을 높인다면 민족문화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임.

- 가장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중의 하나는 만화영화 협력임.
 - 양쪽 방송이 이미 만들어진 만화영화를 교환하고 또 공동으로 만화영화를 제작하여 국제만화영화 시장에 진출한다면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임.
- 남북한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공동의 방송채널이 필요한 바, 위성방송이 가장 합리적인 매체로 남북한이 대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한 통일위성방송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김승수,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할과 과제」〉

- 남북 방송교류를 위해서는 남한언론이 그 결정론적 모델에서 이탈하여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민주적 언론에 定向하는 페러다임적 전환이 필요함.
 - 그러자면 결정론적 방송 페러다임을 강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나 비민주적 방송정책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 방송제작자들의 냉전적이고 반복적인 “이념적 스킴마 (skimmer)” 와 언론자태가 의식전환되어야 함.
- 국민의 의식을 「백지장 (tabula rasa)」로 깔보는 냉전주의적 소수 정책엘리트의 의식전환도 이런 관점에서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적어도 방송전문인들에게 북한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것을 언론적 메시지로 제작할 법적 권한이 확보되어야 남북 방송교류는 그 물꼬가 트일 수 있으며
- 비무장지대에 TV방송 송출전환시설을 세워 비정치적 프로그램을 교환, 방영하자던가
- 라디오가 부족한 북한땅에 남한이 트랜지스터 수신기를 공중 살포하여 북한주민들이 남한전파를 수신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제출되고 있고
- 북한 전문기자들을 양성할 필요성도 있음.

〈방정배, 「남북관계와 전파(방송)통일의 의미」〉

- 남북방송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에 관한 정보를 좀더 개방해야 함.
 - 언론사의 북한방송 청취와 신문구독을 허용하여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문기자의 양성도 필요함.
 - 북한관계 부서에 배치되어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함.

- 선정주의 보도태도를 버려야 함.
 -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점술가와 풍수지리 연구자들이 김일성의 사망일시를 맞추었다는 등의 보도로 국민들로 하여금 미신을 믿게 만드는 일은 절대 지양해야 함.

- 기자협회를 비롯한 일선 언론인 단체가 추진하는 남북 언론교류의 문호를 개방할 필요는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동서독 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TV 수신방식의 남북한 간 기술적 차이가 있고
 - 남북한간에는 독일과 달리 동족상잔의 전쟁경험으로 상호 불신의 깊은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확대 재생산된 상호불신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언론 교류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임.
 - 독일통일은 수백만의 동독인들이 동서독간의 체제를 비교할 수 있었던 데 있었음. 수백만의 서독인들은 동독을 여행했고, 동독주민들은 쉽게 서독TV를 접할 수 있었으나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주민간의 자유여행은 커녕 이산가족들의 일시 상봉조차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서든 시정해야 할 것임.

<정진석, 「북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IV. 종교분야

1.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별 현황

가. 북한체제와 종교

- 북한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체제적 접근(system approach), 행태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역사적 접근(historical approach)은 물론 철학적·윤리적·종교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북한체제는 거대한 우상신권체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교적 접근을 통한 진단이 이루어질때 북한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 1992년 개정된 북한의 새 헌법 68조에는 종교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진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

이러한 헌법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것 같으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유지범위 내에서만 종교의 자

유가 허용됨을 시사하고 있음.

- 북한의 종교는 종교 그 본래의 위치를 지키기 보다 북한 정치체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정치에 예속된 정치의 하위체제(Subsystem)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1990년 4월 22일 실시된 북한최고인민회의 9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는데 그 중에는 종교단체 대표 6명이 포함되어 있음.
- 북한은 종교를 정치적 선전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만 종교활동을 인정하고 있음.
 - 북한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규정되었다고 해도 북한헌법 규정은 김일성교시나 김정일지시, 노동당규약보다 하위의 법규범이 되고 있는 것이 북한체제이므로 이러한 헌법규정이 있다고 해도 북한권력계층의 행태(behavior)에 따라 종교정책이 좌우될 수 있음.

<박완신(북한사회과학원 원장),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인의 과제」 (『민주평통』 회의, '95. 11. 7)>

나. 불 교

- 조선불교도연맹은 1945년 11월에 창립되었으나 1960년대 말까지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음.
 - 그동안 북조선불교도연맹, 북조선불교연합회, 북조선불교총무원 등 여러 명칭으로 개칭되었으며 1972년부터 조선불교도연맹이라는 명칭으로 정식화되었음.
 - 평양에 중앙위원회가 있고 시·도에 시·도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음.
 - 불교종파나 종단이 없는 북한에서는 조선불교도연맹이 전국의 불교도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위원장은 박태호(법명은 학림)이며 「대선사」라고도 호칭함.
 - 부위원장은 황화두(「선사」라고 호칭되며, 부위원장의 이름은 자주 바뀜)이며 본부는 평양의 광법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평양시내에 새로 사무실을 냈다는 보도가 있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음.
- 조선불교도연맹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주로 남한 및 세계 각국의 불교단체들과 유대를 맺는 일과 대남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종교집회에서의 설법도 정치적인 주장과 연계되고 있음.

다. 기독교

- 북한의 종교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며 북한의 기독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종파나 교파가 없이 조선기독교도연맹(개신교)과 조선천주교인협회가 모든 활동을 주관하고 있음.

1) 조선기독교도연맹

-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46년 11월 28일 결성되었음.
 - 1974년에 조선불교도연맹과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와 함께 3개 단체가 남한의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에 대한 비난성명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재개하였고
 -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하려고 시도(74.8)하거나 아시아기독교평화회의(74.11), 기독교평화회의(76.11) 등에 참가하였음.
-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기독교도연맹은 1981년 11월 28일에 창립 35주년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지지, 남조선에서의 미군지배 종식·민족통일촉진대회 소집 등 정치적 주장을 내놓았고, 지금까지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와 호소문 등을 발표하고 있음.

- 1983년에는 신약성서와 찬송가를, '84년에는 구약성서를 번역·간행했고, '88년과 '89년 각각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의 건립을 주도하는 등 제한적이거나 종교인 본연의 활동도 하고 있음.
- 최근 조선기독교도연맹이 밝힌 조직목적은
 - 첫째, 기독교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 둘째, 사회단체나 정당들과 친교를 맺는다.
 - 셋째,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참여한다.
 - 넷째, 조국통일을 위해 일한다.
 - 다섯째, 세계평화와 정의를 위해 일하는 전세계의 모든 개인 및 조직과 접촉을 가진다.
 - 여섯째, 가정교회를 위해 지도자를 양성한다 등임.
- 현재 중앙위원회와 특별시를 포함한 9개 도 및 50개 시·군에 지방위원회가 있다고 하나 지방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6천명 정도의 신도가 연맹에 가입했다고 함.
 - 연맹의 임원진은 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영섭 목사, 서기장 고기준 목사(1994. 3. 30 사망), 중앙위원회 부위

원장 염극렬·김성열·김득룡 등이며

- 이 밖에도 이 연맹에 소속된 목사가 20~30명이 있다고 하나 알려진 사람은 거의 없음.

2) 조선천주교인협회

○ 북한의 특정 종교단체 중 가장 늦게 결성된 것이 조선천주교인협회임.

- 1988년 6월 30일 평양에서 「교회의 발전과 권익옹호, 교인 호상간의 연계와 단합을 도모하여 사랑과 화해, 평화화를 위한 복음정신에 기초하여 각국의 천주교인 및 단체들과도 친선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결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등 그 조직 취지는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적음.
- 그러나 그후 지금까지 10여 차례 담화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김일성 신년사 지지성명, 남한의 구속종교인 석방요구 성명 등 주로 대남 정치적 주장을 하고 있음.
- 특히 1989년 이후에는 이 협회가 「전대협」 대표 임수경 양과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신부의 방북과 귀환, 그리고 구속 등과 관련된 성명서나 담화의 발표에 주력하고 있는 듯하며 남한의 카톨릭 단체나 교황청과도 일정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음.

- 조선천주교인협회의 지방조직은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중앙조직으로는 중앙위원회가 있음.
 -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재철(사무엘), 부위원장은 문창학(베드로)이며
 - 장총성당은 신부가 없이 신도회장과 부회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 회장은 공석이며 부회장은 차성근(율리오), 동희만(다내엘)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밖에 협회 산하에 조직부와 국제부가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활동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음.

라. 천도교

-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1946년 2월 1일에 창립되었고, 1946년 2월 8일에 창당된 북조선 천도교청우당과 거의 같은 조직으로 결성되었음.
 - 최근에도 천도교청우당과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는 조직상으로는 이원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단일단체와 같이 활동함.

- 현재 북한에서 천도교는 신자 수나 교당 혹은 성직자 수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한의 종교단체들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해방 당시 천도교는 북한에서 가장 큰 종교세력(신자가 약 280여만명)이었으며, 초기 북한체제와도 상당한 협조 관계를 유지했고, 「청우당」이라는 정당을 조직하여 북한 정치체제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음.
- 그렇지만 6·25 이후부터 1970년대초까지 북한 천도교의 활동은 거의 없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명의로 여러 차례 성명서를 발표할 뿐 종교적인 행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음.
- 이 단체는 1989년 5월 30일 조선종교인협의회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다른 종교단체들과 함께 수차례 대남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음.
- 현재 평양에 중앙지도위원회가 있고 시·도별로 지방조직이 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지방조직의 활동상황이 보고된 적은 없음.
- 지금까지 알려진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의 임원진은 류미영(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 겸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여봉구(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겸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한영

수(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부위원장 겸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 백현욱(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교화부장), 윤이용(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고문) 등이나 수시로 변경되기도 함.

마. 기타 종교

○ 북한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도교 등 몇몇 종교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밖의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음.

- 다만 사전 등 문헌을 통해서만 여러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고, 종전의 부정적 평가도 없어졌음. 아마도 이런 사전들이 북한 주민들이 세계의 주요 종교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음.

〈류성민(현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주민의 종교별 이해 및 현황」 (월간 『통일』, '95. 6월호)〉

2. 남북 종교교류 현황

- 분단이후 남북한간의 종교교류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동토지대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은 그동안 북한이 “지구상에 단 하나의 종교와 미신이 완전히 없어진 나라”로 변했고, 남한의 각 종교들 역시 반공일변도의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종교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는 분단 장벽, 즉 정치적 현실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70년대에는 북한에서 종교단체들의 활동이 조심스럽게 재개되면서 남한과의 직접교류 보다 국제적인 종교단체들을 통해 북한의 종교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했으나 별로 성과를 얻지 못하였으며, 북한은 그들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에서 개최된 국제적 종교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결의문 등을 채택하기도 하였음.
 - 1975년에 인도의 고타얌에서 개최된 ‘아시아기독교평화회의’ (ACPC)에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들이 참석하여 “한반도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 1976년 체코의 부르노에서 구소련과 동유럽, 비동맹국가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만든 초교파적 연합운동체인 ‘세계기독교평화회의’ (WCPC)에 조선기독교도연맹의

김성욱이 참여하여 “조선에 관한 결의문 및 성명”을 채택했음.

- 한편 북한은 남한의 종교세력, 특히 반정부적 입장에 있던 종교세력들과 연계를 맺으려 했으며, 이와 동시에 국제적인 종교단체들을 통해 종교탄압과 말살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피하려 했음.

북한당국은 반동잔재세력으로 규정했던 종교세력이 사회주의 건설과 대남 통일전선구축을 위한 국내외 통합세력에 유용하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임.

- 그러나 북한이 국내적으로는 종교의 재생을 염려했다는 점은 1972년에 개정·공포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즉 헌법에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동시에 규정함으로써 북한내에서 포교의 자유를 제한했던 것임.

- 남한의 종교인들도 북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대남비방 및 도발을 비난하는 대북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부분적으로는 해외에서의 북한 종교인 접촉을 시도했음.

1970년대에는 남북한 모두 종교교류를 위한 시도에 불과했고 어떤 직접적 접촉이나 교류는 없었으며, 다만 상

호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이에 비해 1980년대초부터 현재까지는 직접교류의 시도 및 해외에서의 접촉이 빈번해지는 양상을 보여왔음. 이때부터 북한 천주교인 대표단이 바티칸과 중국을 방문하는가 하면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중국, 미국, 일본 등지를 방문하였으며 기독교연맹 대표단도 일본, 미국, 스위스 등지를 방문하여 우리나라 기독교계와 만나기도 하였음.

- 반면 북한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종전의 극단적인 반종교정책을 잠시 뒤로하고 종교를 대남 통일선전의 구축에 적극 이용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여 북한의 종교인들을 해외에 순방 혹은 방문시키고 국제적인 종교회의에도 적극 참여케 했으며, 최근에는 그러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결국 북한은 북한 종교단체들의 대표자들을 해외에 순방시키거나 종교회의에 참석시켜 북한에 종교가 있음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을 통해 북한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대남선전을 함으로써, 이른바 남한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은 1980년대초부터 해외동포들, 특히 기독교인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종교인회의를 주최한 사실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 특히 북한은 1981년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기독교자간의 대화’를 개최했고, 세계 각지에서 그 회의를 연계적으로 주관하고 있음.
 - 또한 남한과 해외에 있는 종교인들의 방북도 적극 허용하거나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음.
- 북한이 남한관련 종교인들의 방북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종교적 교류보다는 그 지면에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의도는 특히 최근 두 차례에 걸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방북에서 드러났는데 북한이 방북을 허용한 데에는 미국대통령과 김일성의 친서 혹은 메시지 전달에 주된 목적이 있었으며
 - 방북 종교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북한의 정치적 필요를 역으로 이용하여 북한에 선교를 하려는, 말하자면 동상이몽적인 목적으로 방북에 적극적이었음.
 - 그렇지만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도 북한의 종교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1995년 4월 현재 북한의 종교인들은 남한을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몇 번의 계획과 시도가 있었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남북한 종교인의 교류라는 면에서 볼 때 남

북의 종교인들이 직접 접촉하고 대화를 갖는 일은 매우 드물었음.

- 다만 남한의 종교인들이 북한에 가서 북의 종교인들을 만나거나 해외에서의 접촉한 사례는 여러번 있었음.

〈고태우(북한연구소 연구부장), 「광복 50주년계기 남북종교인 접촉전망 및 당국간 회담으로의 유도방안」(회담사무국 세미나, '95. 2. 9)〉

- 종교계의 교류는 각 종교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미국 등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의 북한 방문이 잦아지면서 남북 종교인간의 교류추진이 희망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했음.

- '88년 스위스 글리온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주선으로 남북기독교인이 만난 이래 개신교도의 남북 접촉이 가장 활발한 편이며
- '92년 2월에 남북한 교회대표가 판문점에서 상호방문문제를 협의한데 이어
- '93년 4월 개신교의 진보와 보수교단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나눔 운동'의 창립총회를 가졌음.

- 또한 북한 어린이에게 16억원 어치의 분유를 보내는 것을 필두로 장기적으로 예배소, 병원, 탁아소 건립과 의료기

기 생산지원 및 버스 승용차 등의 지원을 결의했고, 북으로부터는 백두산 나무와 금강산 돌로 만든 십자가, 성찬기(器) 등을 보내주도록 요청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음.

- '95년을 '평화와 통일의 희년'으로 선포하고 '남북인간 띠잇기' 행사도 벌였으나

- '92년 북한 대표의 서울 방문이 수포로 돌아간 후 사람의 교류가 아닌 물건의 교류로 명맥을 잇고 있는 실정임.

○ 구체적인 인적 교류가 요원한 상태에서 '95년 3월 대중교의 안호상, 김선적 씨가 불법적으로 북한에 들어가 단군릉을 참배하고 돌아와 사회적 충격을 주었음.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 진전시켜야」 (월간 『전망』, '95. 7월호)>

3. 남북 종교교류의 성과와 문제점

가. 성 과

-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할 만큼 영향력을 지닌 종교지도자들이 직접 방북하거나 제3국 등에서 북한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대화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실상을 오히려 잘 파악하게 되었음.
 - 이로 인해 분단의 장벽으로 차단된 북한사회에 대한 맹목적 불신이나 환상적 기대감을 제거하는 좋은 경험을 갖게 되었고
 - 북한 종교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에 도달하여, 대북 선교의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음.
- 천주교의 경우는 1984년 3월에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고 마태오 신부가 한국 신부로는 휴전 이후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교회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게 됨.
 - 고 마태오 신부의 방북 결과 비록 북한에서는 천주교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지만, 북한 당국이 천주교 신부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 오히려 북한 당국이 이같은 통로를 통하여 남한 천주교와의 접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였음.

<김몽은(대치동교회 주임신부), 「북한의 종교와 종교교류」 (월간 『북한』, '95. 7월호)>

나. 문제점

- 첫째로, 정부의 대북정책과 종교계 일부와의 견해차이의 노정임.

- 물론 반드시 일치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대남정책의 일관성에 비한다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대한 견해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일단 정부의 몫임.

※ 금년의 기독교협의회와 기독교도연맹과의 선언에 명시된 비전향장기수의 문제 같은 것이 좋은 예

- 동 선언에서 북은 명단까지 선언문에 명기시켰지만, 남의 경우는 “부당하게 억류되어 있는 피해자”라는 식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을 뿐임. 좀더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언급이 필요함을 감지하게 됨.

- 들쭉는, 남한의 종교계에 있어 제각각의 목소리와 개별적인 접촉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임.
 - 더우기 대부분의 접촉시도는 무분별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음.
 - ※ 대중교는 대중교와 관계없는 북한 천도교와 만나고 합의하고 개신교 역시 교회협의회만이 독주하고 다른 교단들은 소외되고 있으며, 다른 종교와의 협의같은 것은 아예 생각할 수 없는 실정
 - 다원성이라는 측면이 민주주의의 속성이라고 완고하게 주장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협의같은 것을 유도해내야 함.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종교분과위원회나 한국종교평화회의(KCRP)를 통한 최대공약수를 염출해 내지 않으면 안될 것임.
- 세제는, 평양의 단군릉 같은 민족 정통성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범종교적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함.
 - 종교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그 진위나 승배여부를 떠나서 민족문제로서의 단군릉에 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는 것이며, 있어야 한다고 보여지며
 - 정부도 그렇고 모든 종교가 무관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밀입북하는 모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임.

○ 끝으로, 앞으로 있을 종교인들의 방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은 방북 신청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그 욕구와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방북지침」(가칭)과 같은 것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종교인의 방북과 기업인의 방북을 동일한 차원에서 본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

- 종교인의 방북은 기업인과 비교해 볼 때 그 성격이 아주 상이한 것으로 기업인의 경우는 기업의 이윤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종교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임.

〈고태우, 「남북종교인 접촉전망 및 당국간 회담 유도방안」〉

○ 대북 선교의 교두보를 구축하려는 욕심을 앞세워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는 한진주의에 매몰되거나 교파주의적 분열상을 노정시켜 혼돈을 야기시키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았음.

- 남북한 종교교류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교세확장을 목표로 삼거나 교세를 과시하는 경쟁적인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 민간 차원의 교류증대를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경계심을 촉발시켜 남북관계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없지 않았음.

〈김봉은, 「북한의 종교와 종교교류」〉

- 그러나 종교계의 교류는 북한의 종교관이 변하고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음.
- 북한은 늘 남북 종교의 교류를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 “핵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한다”고 말해왔는데
- 미국과 북한간의 경수로 협상이 타결된 만큼 앞으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기대됨.

〈공종원, 「남북민간교류 활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 진전시켜야」〉

4. 결 어

가. 종교인의 과제

- 한국 종교계가 남북한 종교교류접근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명제 앞에 통합된 모습을 보여 건전한 통일문화 창조에 앞장서야하고 이 통일문화를 전 종교인,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도록 해야함.
- 한국 종교계는 민족통일에 대비한 철저한 민간교류접근방안 연구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안을 모색해야함.
- 남북한 종교교류접근은 정부의 3단계 통일정책과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모색해야함.
- 남북한 종교교류접근은 정부의 3단계 통일과정과도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모색해야함.
- 첫 단계인 화해와 협력의 단계에서는 남북종교계 상호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종교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두번째 단계인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한 종교교류의 제도화와 함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종교교류가 포함되도록 하여 다른 사회문화교류에 우선하여 종교교류

-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함.
- 세번째 단계인 1민족 1국가 단계에서는 남북한 종교계가 이질화된 남북한 동포의 생활문화를 하나로 묶는데 기여해야 할 것임.
- 보다 효율적인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함. 범종단적, 초당파적 조직기구를 만들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된 남북한 종교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해야함.
- 이러한 범종교적 강력한 조직기구가 없을 경우 각 종교의 조직이기주의가 발생하여 물질주의적, 경쟁지향적 종교교류협력은 오히려 민족통일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한국 종교계는 서로 자기종교의 조직이기주의적 行態를 버리고 ‘민족의 평화통일’이라는 소명의식 앞에 남북한 종교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한국 종교계는 서로가 타종교 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통일이라는 대명제 앞에 상호협력하는 자세를 취해야할 것임. 과거 3.1운동당시 민족독립이라는 과제 앞에 함께 일어섰던 선조들의 민족정신을 이어받아 한국 종교계는 민족의 통일이라는 과제앞에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임.
- 남북한 종교교류협력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종

교통일기금이 확보되어야 함.

현재 각 종교별로 무너진 북한종교시설복구비용이나 통일비용을 모금하고 있는것은 좋은 일이나 민족의 통일이라는 대명세앞에 장기적으로 범종단차원의 공동종교통일기금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함.

- 한국 종교인들이 민족통일에 관한 협력적 태도를 취할 때 종교인들의 건전한 통일문화 창조는 물론 북한 종교인들과의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임.

〈박완신,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인의 과제」〉

나. 통일과 종교

-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제한할 모든 인위적 요소와 제도적 장치를 용납하지 않는 보편적이고 초월적인 가치를 증거한 당위의 세계가 바로 종교임.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족사회의 궁극적 구원을 지향하는 통일문제를 외면할 수 없으며 남북한 종교교류의 본질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

- 동서독의 경우를 보면 종교교류가 인도주의적 협력의 길을 마련하면서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통일을 앞당기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교훈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서독은 통일을 앞세우기 보다 동독의 어려운 처지를 도와 분단하에서도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나가려고 애썼고, 동독 역시 이런 서독의 태도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정치적 차원에서 교류 협력을 주도하거나 통제하기 보다 민간 차원의 협력, 즉 종교교류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맡겨 보다 지속적이고 폭넓은 관계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배려하였음.

- 그 결과 동서독 내부의 정치상황의 변화나 유럽의 안보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동서독 주민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는 내적인 진전을 꾸준히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며 바로 그 힘이 독일 통일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된 것임.

○ 북한의 경우도 80년대 중반 이후 주체사상과 종교의 관련성을 언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종교정책을 펼치게 됨. 특히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는 대외 선전적인 차원에서 종교의 유용성을 주목하게 되고, 한국사회 내의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주도하는 종교세력과의 연대에도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음.

- 그 결과 1988년 10월에 평양 장충성당과 봉수교회가 문을 열고, 199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면서 종교에 관한 법조항을 완화하여 종교의 자유를 조심스럽게 인정하는 변화를 나타냄. 물론 이 헌법 조항은 종교가 북

한체제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외세의 영향력을 끌어 들이는 것을 경계하는 뚜렷한 단서 조항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음.

○ 아직까지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사회단체에 불과하고, 그 역할도 북한 주민들의 신앙생활을 보장하고 종교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종교 본연의 임무로 연결되고 있지는 못함.

- 단지 북한사회의 최대 이슈인 통일운동에 도움이 되는 도구적 역할에 머물 수 밖에 없고, 남북한 종교교류도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음.

- 때문에 지금까지 남북한 종교교류는 그 도구적 역할에 대한 의구심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었고, 이것이 남북한 종교교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기도 하였음.

○ 남북한 사이에 본격적으로 대두될 인도주의적 교류와 협력의 큰 몫을 담당해야 할 역할이 바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할 수 있는 종교에 부여되고 있음.

- 남북한 종교교류는 남북한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일치를 도모하는 누룩의 구실을 하여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역할을 역사적 소명으로 부여받고 있음.

<김몽은, 「북한의 종교와 종교교류」>

V. 여성·체육분야

1. 남북여성교류 문제

가. 남북여성교류의 특성

- 남북여성간의 교류는 정치성배제, “여성적 조직원리”라 할 수 있는 유연성, 사회부문을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음.
- 남북여성간의 교류는 대부분 비정치적인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를 지속시킬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쿠션역할을 할 수 있으며
 - * 북측 여성은 언제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우리측 여성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약함.
- 또한 여성교류는 경직되고 획일·공격적인 정치성이 강한 남성중심의 교류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 유연성을 가지고 이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상대를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 * 특히 여성에게 훨씬 강한 “정감적 성향”을 잘 활용하면 남북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크게 기여

〈이온죽(서울대 교수), 「남북한 여성교류의 특성과 문제점」 (희담사무국 세미나, '95. 10. 31)〉

나. 남북여성교류의 중요성

- 여성의 참여가 가장 유리한 부문은 사회문화교류이며, 이 부문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동질성 탐색·회복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남북한의 여성교류는 21세기의 새로운 통일국가상의 제시, 남녀 양성평등의 민주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있어 매우 긴요하고도 중요한 것임.
- 남북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성교류이며
- 여성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여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남북한 여성교류의 경과와 향후 전망」(회담사무국 세미나, '95. 10. 31)〉

다. 남북여성교류의 경과

- 1990년 4월에 한국부인회는 '남북한 여성단체 교류추진위원회'를 결성했으며, 여성정치연구소나 한국여성개발원 혹은 YWCA 등 여성계가 이 때를 전후하여 북한을 바로 알자거나 통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음.

- 이 움직임의 결과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90년 9월에 '남북한 여성단체 교류' 를 주장하고 결의했으며
 - '91년 한국부인회는 평양에서 남북 토속음식 경연대회를 열고 다음 해에는 서울에서 남북 수예품 전시회를 갖자는 제의를 했음.
- 그러나 이런 제의는 비정치적 여성들의 민간접촉으로 좋은 아이디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음.
- * 북한이 이를 수용하는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기 때문임.
- 그러나 1991년 5월 남북한 여성들은 일본의 도쿄에서 마침내 첫 만남을 가졌음.
-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주최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였으며
 - 이를 계기로 11월에는 북한의 여성대표들이 서울 토론회에 참석, 큰 기대를 모았음.
- 이후인 '92년 9월에는 평양에서 남북 여성들의 토론회가 열릴 수 있었고 거기서 정신대문제의 공동보조와 여성회담의 정례화가 합의되기도 했지만 별다른 여성교류의 진전은

없었음.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북민간교류활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
진전시켜야」(월간 『전망』, '95. 7월호)〉

라. 남북여성교류의 문제점

- 이제까지 남북여성접촉·교류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여성토론회, 종군위안부 연대회의, 기타 국제회의에서의 우연한 접촉 등 수차례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는 북측이 남북여성접촉·교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불성사되었음.
 - 우리측 여성단체가 제의한 토속음식경연대회, 미용대회, 꽃꽂이대회 등에 대해서는 북측이 무응답하여 성사되지 못하였고
 - 그대신 북측은 단군농 준공식, 대민족회의 참석요청 등 정치성이 강한 행사에 우리측 관련 여성인사를 초청함으로써 불발로 끝났음.
- 남북여성간의 접촉·교류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으로서 남북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

로 진척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북측은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해 온 성향이 매우 강하였고
- 반면 우리측은 북측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하는 가운데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거나 그 추진과정에서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음.

* 이와 함께 여성계 및 시민사회의 북한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준비 부족도 문제로 제기 가능

○ 남북여성교류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상징성은 있을지 모르나, 자칫하면 내용적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내재해 있음.

- 남북 양쪽에서는 모두 여성의 사회정치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친목지향적인 색채를 떨 수 있으며
- 남북여성교류가 비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하여 정치성을 고집할 경우, 남북여성교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우리측에서는 사전 정치성 배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난점이 있음.
- 남북여성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우리 여성계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협조하여 내부적 갈등과 비

방을 지양해야 한다는 자기반성이 필요함.

〈이은죽, 「남북한 여성교류의 특성과 문제점」〉

마. 남북여성교류의 확대방안

- 남북여성교류는 그동안의 교류경험을 반추, 성찰하는 가운데 정치성 배제, 인도적·문화적 교류에 중점을 두어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은 하루속히 극복하는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것임.
- 남북한의 여성교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우선 안정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한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함.
 - 우리측에서는 정권안보를 위한 통일정책의 지양, 정부개입의 최소화와 민간자율성 확대, 재정적 뒷받침 및 여성지도자·단체간의 상호신뢰회복이 요망되며
 - 북측에서는 여성교류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함.
 - 이와 함께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선호와 북한의 정치·군사 우선주의를 접근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손봉숙, 「남북한 여성교류의 경과와 향후 전망」〉

2. 남북스포츠교류 문제

가. 스포츠교류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스포츠는 단순한 체력 증진이나 경쟁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개성과 이해를 지닌 이질적인 개인유기체(個人有機體)를 사회적 공동체로 융화시키는 역할도 함. 즉 스포츠는 사회 통합과 사회 이동은 물론, 정치·외교적인 기능도 갖고 있음.
 - 1990년에 있었던 「남북통일축구대회」와 1991년에 있었던 「세계탁구」 및 「세계 청소년 축구」 단일팀 구성 참가는 반세기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온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 상호 이해 및 친선을 증진시켜 주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었으며
 - 비록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스포츠가 남북 관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남북스포츠교류의 정치적 기능

- 남북스포츠 교류의 정치적 기능은 두체제간의 극단적인 대결구도로 말미암아 순기능(順機能)과 역기능(逆機能) 두 갈래의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 순기능이란 남북간의 화합과 교류·협력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 역기능이란 어느 일방이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여 선린관계를 저해하고 긴장을 조성하는 등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 순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남북한간의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족으로서 하나됨을 뜨겁게 느낀 경험이 있음.
- 이와 같은 경험들이야말로 남북간의 대결의식을 완화시키고, 화합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통일의 의욕을 자극하는 하나의 정치적 순기능이 아닐 수 없음.
 - 1990년 9월 북경 아시안게임을 관람하던 남북한 동포들의 공동응원은 한 핏줄, 한 형제라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통일을 향해 달리고 있었음.
 - 1990년 10월 남북한 축구선수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55년만에 경·평 축구대회(통일축구대회)를 제개하였고

- 또한 1991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탁구와 축구의 단일 팀구성을 통해 “지바 탁구대회”에서 여자 단체팀이 우승하였고, “리스본 축구대회”에서 남북단일팀이 8강에 진출하였음.
- 역기능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남북 스포츠 교류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음.
 - 1964년 동경 올림픽대회 단일팀 추진은 북한의 IOC 가입용으로,
 - 1979년 평양 탁구대회 단일팀 추진은 남한팀 입북 방해용으로,
 - 1984년 LA 올림픽단일팀 추진은 북한팀 불참 명분용으로,
 - 1988년 서울 올림픽단일팀 추진은 대회 방해용으로,
 - 1990년 통일축구와 탁구 및 축구단일팀 구성 성사도 조국통일에 기여보다는 당시 북한의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선에서 끝나고 말았음.
- 스포츠의 정치적 역기능은 북한측에 의해서만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님. 남북한과 같이 이데올로기가 대결되어 있고 긴장되어 있는 냉전구조 속에서는 어느쪽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

다.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남북한간의 입장차이

- 남북한은 공히 명분상으로는 스포츠교류를 “통일을 위한 가교요, 민족적 신뢰와 일체감 회복을 위한 발판”으로 역설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기 엇갈리는 목표를 숨겨 놓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우리측 입장>

-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우리측의 목적이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바탕으로한 평화적 조국통일”에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며 따라서 우리정부는 점진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3단계 추진법을 강조하고 있음.
 - 1단계로서 종목별 교류를 정례화하고,
 - 2단계로서는 주요 국제경기에 단일팀을 구성·참가하며,
 - 3단계에서는 국제체육행사를 공동주최하는 등 “선 교류, 후 통합”이라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음.
- 즉 스포츠 교류가 바탕이 되어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는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북한 사회를 개방하고 민주화를 촉진하므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내려는 우리정부의 3단계 통일론과 맥을 같이함.

<북측 입장>

- 남북 스포츠 교류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도 표면성으로는 남한과 다를게 없으나 남북 스포츠 교류를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이질화 극복과 통합, 화해와 협력체제 구축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것이 틀림없으며, 스포츠 교류를 북한의 통일노선 관철을 위한 교량적 수단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음.
- 남한이 「선 신뢰구축, 후 정치통합」의 점진적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선 정치통합, 후 신뢰구축」의 역순을 주장하고 있음.
 - 스포츠교류도 「선 단일팀, 후 친선경기」 수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북한의 스포츠교류 접근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 방향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단일팀의 명칭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으며
 - 남북단일팀의 호칭을 「고려」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바, 이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고려」를 그대로 채택하자는 데 연유한 것임.
- 남북체육회담에 임하는 북한측의 협상태도는 체육회담의 제의 단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회담 전개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후 회담결렬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전술을 항상 쓰고 있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스포츠의적 전략 목표가 항상 내재되어 있었음.

- 1979년의 체육회담은 제35회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제의된 것으로, 단일팀 구성원칙을 내세워 한국팀의 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며
- '84 LA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위한 체육회담의 경우도 올림픽 참가선수 명단 제출일이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을 전격 제의하여 남한 단독으로는 LA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하였음.

라. 남북스포츠교류의 활성화 방안

- 첫째, 남북스포츠교류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앞으로의 남북스포츠교류의 재개는 남북간의 정치적 변화, 특히 북한의 정치적 상황 여하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할 것임.
- 둘째,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보다 확고한 우리의 기본전략이 필요하며 우리의 통일원칙이 교류를 통한 「선 화해협력, 후 민족통일」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이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예컨대 비무장지대에 「남북공동(통일)체육촌」을 건설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추진해 볼 만한 사업이라 사료됨.
- 세번째로는, 남북스포츠교류의 추진을 위한 '대북 접근원

칙' 임.

- 「남북기본합의서」는 “쌍방사이의 관계가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 남과 북은 독립된 개별 국가로서의 위상과 외교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유엔에도 제각기 가입한 실정에 따라서 남북 스포츠교류의 실행이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접근원칙이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임.

○ 끝으로, 다른 분야의 남북교류와 마찬가지로 남북스포츠교류의 진행도 점진적인 발전과 성숙을 도모해 가야 함.

- 점진성의 원칙은 체제불간섭에서 고려되는 예민한 문제들, 예컨대 상대방의 체제에 위험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안전수준의 고려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북한 사회의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이학래(한양대 교수), 「남북스포츠교류의 당면과제」, '95 회담사무국 위촉과제〉

수 록 논 문 명

고태우(북한연구소 부장), 「광복 50주년계기 남북종교인 접촉전망 및 당국간 회담으로의 유도방안」(회담사무국 세미나, '95. 2. 9)

공종원(조선일보 논설위원),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는 상호주의 입각해 진전시켜야」(월간 『전망』, '95. 7월호)

김도영(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 「남북대화시 국내언론의 역할과 문제점」(회담사무국, '95 위촉과제)

김몽은(대치동교회 주임신부), 「북한의 종교와 종교교류 : 천주교」(월간 『북한』, '95. 7월호)

김성윤(단국대 교수), 「동서독 사회문화교류가 남북교류에 주는 시사점」(회담사무국, '95 위촉과제)

김승수(전북대 교수), 「통일을 지향하는 언론의 역할과 과제」(전북대 세미나, '95. 11. 9)

김비환(한국언론연구원 연구위원), 「독일통일과 언론역할 :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회담사무국 세미나, '95. 5. 26)

류성만(현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북한주민의 종교별 이해 및 현황」(월간 『통일』, '95. 6월호)

박완신(북한사회과학원 원장),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인의 과제」(『민주평통』회의, '95.11.7)

방정배(성균관대 교수), 「남북한 관계와 전파(방송)통일의 의미」(성균관대 세미나, '95.11.3)

서길수(서경대 교수), 「남북역사학자간 교류협력현황 및 증진방안 : 고려사 연구를 중심으로」(회담사무국, '95 위촉과제)

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 「남북여성교류의 경과와 향후전망」(회담사무국 세미나, '95.10.31)

신윤표(한남대 교수), 「한국에서 본 남북학술교류의 가능성과 한계성」(숭실대 세미나, '95.10.5)

이남복(청주대 교수), 「통일환경의 조성파 남북 사회·문화교류」(배재대 세미나, '95.11.9)

이온죽(서울대 교수), 「남북여성교류의 특성과 문제점」(회담사무국 세미나, '95.10.31)

이우영(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문화통합의 과제와 전망」(국민대 세미나, '95.11.3)

이학래(한양대 교수), 「남북 스포츠 교류의 당면과제」(회담사무국, '95 위촉과제)

정진석 (한국외대 교수), 「북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대한언론인회 세미나, '95. 11. 16)

조유진 (국립민속박물관 관장), 「남북 학술문화교류에 대한 제언 : 남북 문화유산에 대한 제언」(일본 국제학술 심포지엄, '95. 8)

조혜정 (연세대 교수), 「남한과 북조선의 문화적 동질성과 이질성」(연세대 심포지움, '95. 11. 28)

조 형 (이화여대 교수), 「세계화시대의 통일과 여성」(강원대 세미나, '95. 11. 1)

홍근수 (향린교회 목사), 「북한의 종교 : 기독교의 역사와 현황」(호서대 세미나, '95. 9. 26)

황경숙 (한양대 방송계장), 「통일지향적 언론의 역할과 자세」(월간 『북한』, '95. 3월호)

남북간 민간부문 접촉·대화문제

인 쇄: 1995년 12월 일

발 행: 1995년 12월 일

발 행 처: 남북회담사무국 운영2부
사회문화회담과

(Tel: 730-3655)

인 쇄 처: 진 아 기 획

(Tel: 278-2955)

〈비매품〉